



허술한 제도·부실 검증...공익직불금 줄줄 샌다

농관원 이행점검 전체 필지 중 5%만 '표본 조사' 함께 부정수급 매년 급증...점검 과정 적발 비중도 15% 불과 "조사대상 확대·시행지침 개선 등 근본 대책 절실" 지적

(속보)허술한 공익직불금 제도가 부정수급을 양산하고 있다.

일선 시·군의 신청을 거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공익직불금 지급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신청 필지 중 극히 일부인 5%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1일 시행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공익직불금 시행 절차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지급 여부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전남지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면적은 12만9천638필지(22만2천941ha)에 달했지만 표본 조사는 5

%에 불과한 6만1천160필지(1만2천804ha)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적으로도 신청 면적 634만3천필지(112만3천ha) 가운데 5.2%인 33만6천필지(6만3천ha)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농관원이 실시하는 이행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과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지만 표본이 적은 데다, 3개월여(6월1일~9월15일)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도입 첫 해 2건 뿐이었던 전국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적발 연도 기준)는 2021년 110건, 2022년 120건, 2023년 177건으로 급증했다.

전남에서도 2020년 1건, 2021년 19건, 2022년 35건, 2023년 26건 등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자체·합동조사(지자체) 등 사후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 비중은 전체의 15.8%(28건)에 불과



장맛비...징검다리 출입금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남구 양림동 광주천 징검다리 인근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김애리 기자

했다. 반면, 주민 신고는 40.6%(72건), 자진 신고는 33.8%(60건), 수사기관 6.7%(12건), 감사기관 조치 요구 2.8%(5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적발이 대부분이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무안군 뽕농 불법성도 필지에 대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본보 5월27일자 1면) 역시 허술한 제도로 인한 현실 낭비 사례로 꼽힌다.

무안군은 뽕농 불법성도 확인(2023년 3월)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일로써 망월리 소재 33필지(7.8ha) 중 17필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직불금을 지급했다. 지급 과정에서 농관원 전남지원이 이행 점검을 했지만 일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위주만 확인하는 바람에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상회복 명령 확정 판결을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적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현행 공익직불법이 지급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직불금 시행 지침은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 농지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 등 11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무안군의 사례처럼 '원상회복 명령 대상 필지'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이 담겨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급된 직불금이 환수 대상인지 도울 해 신청 가능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보도 이후 농림부가 원상회복 명령 농지에 한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기존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표본 조사 확대, 시행 지침 개선 등 근본 대책 없이는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을 현 지침 상 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시원 기자

국회 '채상병특검법' 놓고 여야 정면 충돌

민주당 법안 상정 강행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野 '토론 종결권'으로 與반발 무력화 방침...오늘 표결

여야가 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정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채상병특검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해 표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일부는 양보

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의 단순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전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190석이 넘는 범야권의 찬성표로 채상병특검법이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

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법안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추진하는 '방송4법'의 처리 시점을 놓고선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도 상정·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를 막아서는 만큼 일단 시급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 방송4법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이처럼 6월 국회 막바지에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이면서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을 비롯해 7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5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당일 개원식을 하고 8일 민주당, 9일 국민의힘 순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김진수 기자

Today

- 광주시, 등·광역시최초당직 폐지 2면
-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정음 14면
- 김도영, 두번째 월간 MVP 도전 16면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

광주매일신문과 광주시문인협회는 호남 향토문학 정진을 계승하고 지역의 문학 미래를 이끌 참신하고 역량 있는 문예인을 발굴하고자 제11회 무등산 문학백일장을 개최합니다. 무등산 문학백일장은 무등산과 호남 등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 주제와 가사문학을 통해 향토문학을 발전시키고 예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더욱 더 숭화시키기 위한 일환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 등을 새롭게 풀어내는 장이 될 것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예비 문인의 등용문이자, 창작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이번 백일장에 글쓰기와 문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 부문

① 시 ② 산문(스토리텔링)

작품 주제

① 무등산 및 지역 향토성 관련 자유주제
② 가사문학 관련 자유주제
(스토리텔링은 인물, 플롯, 주제가 담겨있는 창의적인 작품)

응모 방법

- 응모대상 : 일반부 / 청소년(중·고생)
- 원고분량 : 시(1인당 3편 이내) / 산문(1인 1편, 5천~6천자 내외)
- 응모기간 : 2024년 6월 10일 ~ 8월 31일
- 입상자 발표 : 2024년 9월 18일(수) 본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보내실 곳 : 무등산문학백일장 홈페이지(<http://gasa.kjdaily.com>)
- 문 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

기 타

- 응모 작품 상단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 학생부(학교명·학년) 기재할 것.
- 등단 작가는 본 공모에 접수할 수 없음
- 기존 발표작이거나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수상이 취소됨.

주최·주관 광주광역시문인협회 · 광주매일신문